환경과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새로운 해법 - 그린홈

- 건설업체참여와기술개발유인정책마련을, 상품성 · 지속성담보되어야-

2007년 제4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지구온난화는 명백히진행중"이라는분명한경고에서도알 수 있듯이, 지구 환경의 악화와 그로 인한 피해는이제낯설지않다. 최근이러한우려는 기상 이변 속출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 증가 등으로현실화되고있다. 한반도도예외는 아니어서 약 100년 간(1912 2008년)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1.7℃로 지구 전체 평균기온상승률(0.74℃)에비해매우높은 편이며, 강수량도최근10년동안약19% 증가를보일정도로심각하다. 지구환경의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에너지과소비와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는 인류의 생존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현안으로 떠오르고있는것이다.

한편, 주목을끄는것은지구온난화해결책의 한 가지로 제시되는 화석연료의 사용감축과효율적에너지사용이주택산업과도 깊은 연관성이있으며, 충분한역할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7년지식경제부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총에너지사용량 1억 8,000만 TOE 중에서 건축물이 24%를차지하고, 이중주택이 54%나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선택의 여지없는 그린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의회복노력과함께바람직한경제발전의 방향으로서' 녹색성장 이정책의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방법론의 하나로 2008년대통령이8 · 15 경축사에서언급했던' 그린홈100만호프로젝트 도최근부각되고있다.

그린홈(green home)이란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수있는주택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된다. 말하자면,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고있는만큼 이산화탄소의배출규제를위한정책적연대도국제적핫이슈로되고있지만, 우리도공급물량의확보에만 치중하던주택정책을에너지효율적인주택건설로의근본적인 전환이시급한실정이다. 에너지절감과신재생에너지사용등저에너지친환경주택인그린홈건설은기술과경제성, 국민들의 호응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있지만, 이미선택의여지가없는필수과제로다가와있기때문이다.

법 제도 - 이제 막' 걸음마 '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벌써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에 적극적인지

원과 권장하는 정책을 펼쳐 주택 구입자의 관심을높이고주택건설업자들의친환경저탄소 주택건설에의참여를유도하고 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아직도주택이라고하면 가격상승에가장큰비중을두는부동산투자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 · 지구 환경과연관된사항은사실상관심밖의일이다. 특히초기투자비가많이드는저에너지저탄소형 주택건설은비용증가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주택 소비자나 주택건설업체 모두매력을느끼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린홈에 관한 제도화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건축법』에서단열기준과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2006년부터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에너지 성능 등급을 분양 공고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것이제도화의 전부일 정도다. 최근 들어서야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작업에 박차를가하고있다. 그린홈주택의건설및 공급을확대하고품질을제고하기위한' 그린홈 성능 및 건설 기준 이 거의 완성단계에와있고, 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현상공모및턴키입찰시그린홈성능에따라가산점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한다. 일정기준이상의그린홈성능을 인정받은신축및기존주택개보수에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8월부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 인허가시 그린홈 등급(에너지및이산화탄소절감률) 표시의 무화, ' 그린홈 성능 및 건설 기준 '고시 근거마련을내용으로하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실천적 단계로 빠르게 옮아가기위한제도구축노력도어느정도구체화되고있는모습이다. 2009년 7월 30일에는저탄소 · 녹색성장을위한그린홈성능및건설기준제정을위한공청회도개최된바있다.

공감대와 상품성, 그리고지속성

그린홈 정책은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떠나우리가준비하고대처해야할필연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노력과 효과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도 달라질 것이다. 정책 추진과관련하여고려되어야할몇가지원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그린홈 건설이 주택시장에서 공감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도 구비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업체와주택 소비자 모두 가체감하고공감할 수있는정책이되어야 한다. 단순히지구환경의위기극복이라든지또는한반도의기후변화예방등의취지는추상적이고관념적이어서지속적인정책으로자리매김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둘째, 그린홈정책이일시적인것이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하므로 강제적 · 타율적수단이아닌자율적이고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제도화가 추진되어야한다. 마치국민을가르치듯 접근하게 되면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자칫 소모적인 공방에 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수도있다.

세번째로, 초기의열악한환경에서시장실패가조기에나타나면국민들의거부감이 확산될수도있으므로시행착오를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시효과위주의정책 추진을지양하여국민이나주택시장의불신감이 팽배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주택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술 개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제화와규정을통한의무화도하나의수단이될수있지만, 창의적인아이디어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관련 사업의 초기에 투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려면아무래도과감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정부가정책순위에서뒤로미뤄놓고있는기존주택의그린홈화 방안도함께 추진되어야한다. 기술적인한계와비용부담 지출이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있겠지만, 이것이병행되지않을경우 그린홈정책은반쪽정책이되거나분양주택의 판촉용으로 전락하는 일회성 정책에 그칠수도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그린홈에대한바른인식을 갖도록정책당국이법제도추진과 함께차분하고도 꼼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한다. 자칫그린홈정책이공동주택간의단순한품질이나가격평가항목으로전락되지않도록해야하는것은물론이다.

환경과 성장과 삶의 질의 해법으로

녹색성장은말만으로되는것이아닐뿐더러 앞으로도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과제이다. 특히그린홈주택이에너지성능을 효율화하고 절약한다면 그 효과는 지대할뿐만아니라주택에거주하는국민개개인이 녹색 성장의 필요성과 친환경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즉, 그린홈 정책은 바람직한방향으로제대로추진된다면지구환경보호와 국제적공조에도일조하고, 친환경주거 생활을통한 만족도도 높일 수있다. 나아가 주택건설업체의 新성장 사업 부문으로서의 가능성도 열려있는1석3조이상의효과를 거둘수도 있다. 또한국내총에너지사용량의약13%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에너지 사용 행태를 효율적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은 ' 기후 변화 대응, 녹색성장 기여, 국민의 삶의 질향상 을가능하게하는해법으로의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skdoo@cerik.re.kr